

민주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 중징계

중앙위 90% 넘는 찬성률로 의결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내용도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개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민주성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직접적으로 담는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했다. 찬성 93.63%에 반대 6.37%로 통과한 강령 개정 전문을 살펴보면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했다.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국가상은 '통합의 국가'로 명시했고,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원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수정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금융 세제 원칙'도 담겼다. 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았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에서 9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는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점을 고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총선 등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제한 규정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 역시 92.9%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다. 반대는 7.08%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컷오프' 등 공천 과정의 당 결정에 대

한 불복에 대한 징계의 폭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불복 등 탈당자를 대상으로 '대선·총선 기여도' 등의 기준을 잡아 입·복당 시키는 것을 반복해 왔고, 실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에도 각종 선거 과정에 탈당당 광주·전남지역 정치인에 대한 민주당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총선 기여도가 주요 지표로 이용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탈당해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눈에 들거

나 특정 정치인에게 줄 서면 복당이 가능한 구조이다"는 불멘소리로 나오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경선 과정의 감정 규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날 강령 개정을 두고도 민주당 안팎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효과가 없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포털개혁 기구 띄워...“편향된 뉴스 유통”

“뉴스타파 등 선정과정 의혹 규명” 14일 세미나·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룬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의 편집·공급 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민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뉴스타파'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할 때를 심사·선정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공정성 시비와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작년 5월부터 잠정 중단됐다가 조만간 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TF 1차 회의에서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뉴스 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두관 “개딸과 결별하고 혁신회의 해체해야”

정봉주 “이재명 팔이”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12일 이재명 후보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강성 지지층인 속칭 '개혁의 딸'(개딸)과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일극(一極)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며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 강경 '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후보의 흉위병이 돼 위세 부리며 줄 세우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날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개헌을 통한 2026년 지방선거·대선 동시 실시를 거듭 요구하

고, 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을 위한 국민대연합' 구성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공동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그 산하에 범국민 개헌추진위를 만들어 국민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이재명 팔이"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이들은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며 실세 놀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을 위한단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적인 대화다 보니 진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국힘 광주시당 예타통과 협력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이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는 전남대병원 새병원 신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남대병원과 손을 잡았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12일 전남대병원 행정동 접견실에서 정진 전남대병원장, 새병원 추진단 등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신축 사업 예타 통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1070병상, 연면적 24만㎡, 총사업비 1조 1438억원 규모다. 새병원이 지어지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첨단 의료산업 활성화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진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의료 비효율화의 악순환은 수도권과 건강 수준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연례 예타 통과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광주 민생토론회 건의 사항 요청하는 등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주장인 셈"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자 역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자 밀정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광복회 등의 독립운동단체가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여는 기념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광복절 전날에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당일에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 등 독립지사 묘역도 참배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